

중 입국 후 검사 해제... 입국 전 검사는 '아직'

중국 내 유행 위험도 낮다는 보건당국 판단 남은 입국 전 검사·큐코드, 10일까지는 유지 WHO 비상사태 해제에 발 맞추자는 주장도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중국발 방역 조치는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해제한다.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을 일원화한 조치도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유행이 필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인 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유행이 안정세로 진입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다.

한때 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1월5일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역 8주차에는 양성률이 0.9%까지 내려왔

다. 지난달 28일에는 단기체류 중국인 190명이 입국 후 PCR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총 18만 3496명이다. 이중 8만264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5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3.1%로 유행이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

우려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방역 조치 완화 결정에 작용했다.

입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사망은 95.1%가 감소했고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자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發)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93.2%가 BA.5 세부계통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방역 조치로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조치를 우선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입 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조치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 전 검사 의무화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 효과가 있었던 만큼 입국 전 검사 해제 여부는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WHO가 4-5월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때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같이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중국 입국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코로나19 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양성으로 검사에서 뜨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제104주년 삼일절 맞아 총흔탐 참배

완도해양경찰서는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관내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고금도 항일운동 총흔탐 참배 후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실시

나주경찰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치매환자 실종예방 등을 위해 치매환자 및 고령인가가 높은 경로당 13개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경찰, 담양군복지재단과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 더불어 사는 안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담양=박종영기자



보성경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보성경찰서는 2월 27일 서장을 포함하여 각 과·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상호 존중·화합하는 보성경찰'을 위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철순기자



강진소방, 제51회 강진청자축제서 119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강진소방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동부소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서 주관 합동소방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로머스파크에서 소방서 주관 합동소방훈련을 지난 2월 2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학교비정규노조 "비정규직 차별 해소...오는 31일 2차 총파업"

20차례 임금협상 진행, 신학기 총파업 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광주학교비정규직회의는 교육부와 20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25일 1차 파업까지 진행 했지만 사측이 노사협의조차 거부해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등 총 20차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다"며 "사측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을 하며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

정비 낙담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쓰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며 "법령에 근거해 임금의 지불 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한발 물러나 교육감 임기 내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협의부터 진행하자고 제안 했으며 중장기 개편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화조차 전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수적인 기재부조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0.5% 추가 인상, 정부 공무원지원회도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



측 교섭대표인 대구교육청은 언론의 취재를 막고 노조가 감금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학기 총파업까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3월 신학기 총파업의 원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해 262개 학교가 급식을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대체했다.

김재한기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지역격차 심화

신도시로 젊은 층 늘어난 남양주시엔 30곳 넘어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에도 인구 구성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1일 일선 지자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내에서는 전망이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의과대학에서도 비인기과가 되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 진료 수요가 감소하고, 결국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불러온 이 같은 문제는 지역 간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수의 차이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에는 아직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즐비한 반면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인구 74만을 넘긴 남양주시의 경우 현재 지역 내에 소아청소년과 기관을 단 의원급 의료기관만 30곳, 50병상 이상을 갖춘 입원 가능 병원만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자녀를 둔 청장년층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지역 소아·청소년들의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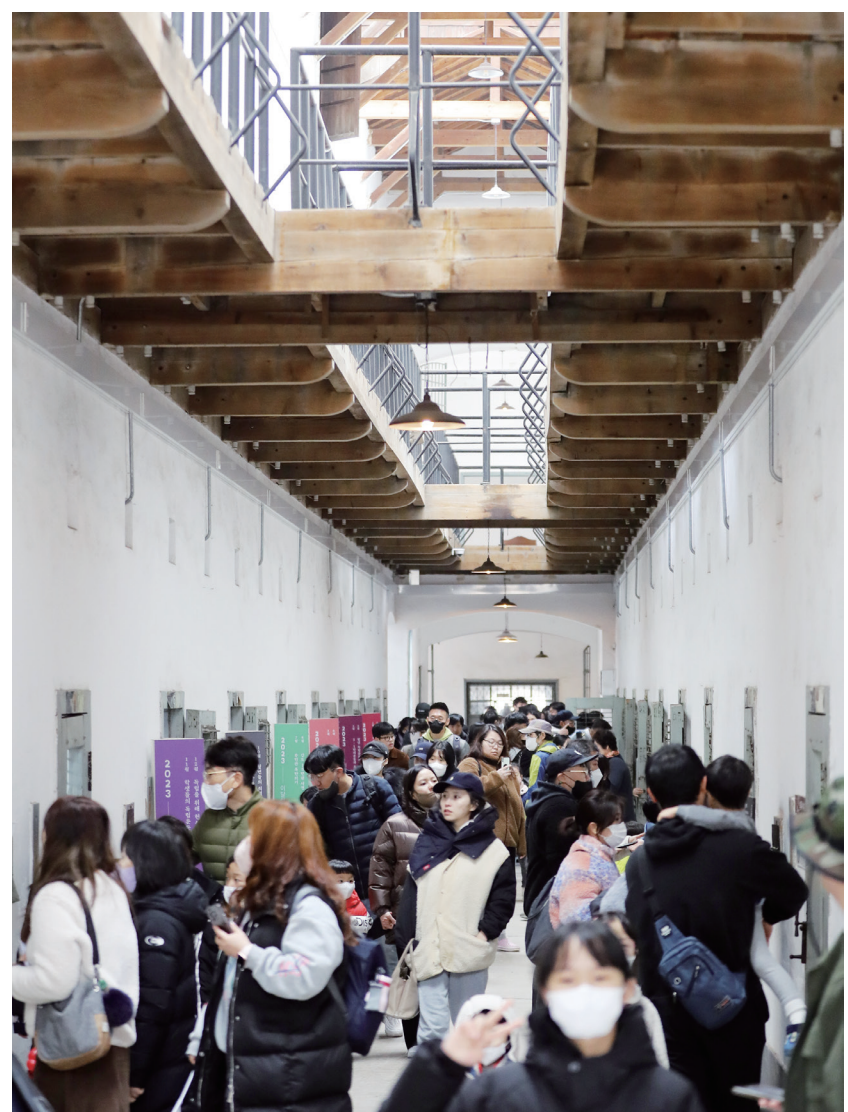
반면 가평지역은 지난해 20년 가까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던 마지막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의원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다.

소멸위기에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심한 가평군에서 18년간 아이들을 진료한 해당 의원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워낙 소아·청소년 인구가 적은 점도 문제지만, 지역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이 경영상 심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산모들이 대부분 춘천이나 남양주에서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출산한 병원이거나 인근의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비기자



관람객으로 붐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

사에서 관람객들이 옥사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